



주간통일정세 2009-51(2009.12.14~12.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5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주체철 생산' 성진제강 방문(12/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함경북도 김책시 소재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아 "자체의 기술로 주체철 제강법을 완성한 것은 3차 핵시험 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철'이란 철광석 소비를 낮추면서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중유, 코크스 등을 쓰지 않고 북한내에서 조달한 재료를 이용해 생산된 철을 말함. 통신은 김 위원장이 "주체철이 강물처럼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재래식 제강법에 종지부를 찍고 생산을 부단히 늘려가고 있는 데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언
 -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동행

- **김정일, 김책제철소·청진광산금속대 시찰(1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청진광산금속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새로 건설한 주체철용광로 등을 둘러보고 "주체철용광로는 우리나라에 풍부히 매장돼 있는 원료와 연료에 의거해 철을 생산하는 우리 식의 독특한 용광로"라며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이제는 무섭게 용을 쓰며 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그는 또 청진광산금속대학에 가서는 "나라의 채취, 금속공업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을 널리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
 - 이번 청진광산금속대학 현지 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수행했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는 이들 외에 당 제1부부장인 주규창, 리제강 두 사람이 추가로 수행



● **김정일, 라선시 첫 현지도(12/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라선대흥무역회사 등 라선시를 방문,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북한이 1991년 12월 라선시를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이래 김 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라선대흥무역회사의 수산물종합가공장, 축양장, 술가공장 등을 둘러보고 수출품 생산 및 수출실태를 파악한 뒤 “대외활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이어 라선시를 돌아보면서 도시 건설과 도시경영 전반을 파악한 후 “중요한 대외무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있게 잘 꾸리고 시의 당 및 행정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의 현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북핵은 남북관계 장애물 아니다(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핵문제는 북남관계의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될수도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측 당국자들의 북핵 관련 발언을 언급,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의 반공화국 핵소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와 핵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도전, 도발이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며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고립압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과거 “내외 반공화국 세력의 핵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도 두차례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됐다”며 “북남관계 문제가 해결돼야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

● **北, 오바마 친서 강석주에 전달(12/18, 조선중앙통신)**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친서를 조선(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조선정책 특별대표가 9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에게 전달했다”고 보도, 그러나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당 역사연구소 소장에 김정임 임명(12/17,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일가족의 이른바 ‘혁명사적’을 발굴·보존·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노동당 역사연구소 소장(장관급)에 김정임 부소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북한 언론은 17일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 오중흡의 70주기 중앙추모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소장이 사퇴를 했다고 보도
- 당역사연구소장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형인 강석승이 1975년부터 무려 25년간 역임했으나 2001년 사망 이후 공석이었으며 2003년부터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겸임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소장 임명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김 신임 소장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점으로 미뤄 그가 김정은 후계 구도 구축을 위한 권력이동이 이뤄진 2월께 소장에 임명됐을 것으로 관측
- 김 신임 소장은 1985년부터 16년간 이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해왔으며 1992년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았음.

● 北잡지, 공무원 평가 강화 촉구(2009년 3호, 정치법률연구)

- 북한의 계간 학술지인 ‘정치법률연구’는 지난 2005년 말 제정된 ‘공무원 자격판정법’에 따른 공무원 평가를 강화, “공무원 대열의 사상적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잡지는 ‘사회주의 국가 관리에서 공무원 자격판정 제도 확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 자격판정 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은 선군시대 공무원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실력가가 되어 강성대국 건설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 해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이 법은 또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평가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명시

● 노동신문, 美오바마 핵구상, 실천 따라야(12/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지체없이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에 대해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은 말로 이뤄질 수 없고 실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세계 면전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제창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량으로 보나, 세계 도처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나 미국은 응당 핵군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저들의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앞에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



- **北, 美에 대북 제재해제 요구(12/16, 연합)**
 - 북한은 지난 8~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짐.
 - 외교소식통은 “북한측이 보즈워스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기존 입장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소개
- **北, 보즈워스에 6자회담 복귀 명분 요구(12/16,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2월 8~10일 방북했을 때 6자회담 이탈 방침을 번복하고 복귀할 명분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다. 경제 관련

- **伊·獨, 북한에 식량지원(12/19, 자유아시아방송)**
 - 이탈리아와 독일 정부가 북한에 85만 유로 상당의 식량과 겨울옷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RFA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은 북한에 30만 유로 규모의 식량과 보건 물품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 이탈리아는 2003년 북한과 ‘상호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한 후 해마다 많게는 1백만~3백만 유로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지원해 왔음.
 - 독일 정부 또한 북한에 식량개발 사업과 겨울옷 제공을 위해 55만 유로를 독일에 기반을 둔 국제 NGO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과 가톨릭 국제 구호단체 ‘카리타스(Caritas)’에 기부했다고 RFA는 전언, 이 중 40만 유로는 저먼 애그로 액션을 통해 북한 내 과수나무 재배와 종자 개발 사업을 위해, 나머지 15만 유로는 카리타스를 통해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식량과 겨울옷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임. 독일은 2008년에도 2백만 유로의 기부금을 NG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 과수나무 재배와 옥수수과 감자 종자 개발 등을 지원했음.
- **北 라진·선봉 관광지 개방 검토(12/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10년 라진·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함경북도 칠보산과 황해남도 해주, 평양 일부 지역 등을 새로 개방했듯이 내년에도 라진·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고려여행사측은 관광산업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므로 새 관광지 개방과 상품 개발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변화라고 분석



- 카커릴 대표는 올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1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으며 미국과 영국 관광객은 줄었지만 기타 유럽국가의 관광객은 다소 늘었다고 전언
- **北통신, 美기업가대표단과 투자환경 조성 논의(12/17, 조선중앙통신)**
 - 찰스 보이드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이 1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의 경제부문 일꾼(간부)들과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 통신은 ‘미국 기업가대표단 평양 체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북 기간 이 대표단이 “김일성종합대학,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평양 지하철도, 평양방직공장, 평양326전선공장 등을 참관했다”고 보도
- **김정일, 미국 등 서방자본 유치하라고 지시(12/17, 중앙일보)**
 - 북한이 11월 30일 단행한 화폐 개혁은 지난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관리 노선 변경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1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서 “김 위원장이 9월 초 내각의 무역성과 대외사업기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조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렸다”며 “화폐 개혁은 이에 따라 내부 통제와 계획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언급, 이 소식통은 북한 내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김 위원장의 지시를 담은 새 경제관리 노선은 2010년 1월 1일 3개 신문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
 - 이는 이번 화폐 개혁의 주목적이 2002년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소규모 시장(장마당) 등의 시장경제 요소를 약화시키고, 국가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나타내준다고 이 신문은 보도,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상임위원회가 16일 부동산의 등록과 이용, 사용료 납부를 규제하는 부동산관리법과 물자소비기준법 등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시장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대북 소식통은 또 “김 위원장은 경제부처 간부들에게 경제관리 노선 변경 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의 유치도 지시했다”고 전언, 소식통은 “북한은 93년과 2002년 나진·선봉과 신의주 특구를 통해 해외 자본 유치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에는 특구 확대와 특구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도 적극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
- **北, 경제관계법 제정, 화폐개혁 후속행보 박차(12/16, 연합뉴스)**
 - 북한이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부동산관리법 등 경제관계 법령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제정, 북한이 이들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견 부족한 재정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 중앙집권적 요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함.



- 먼저 신설된 '부동산관리법'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확산된 시장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부분적 점유권이 허용되는 부동산의 사용료 징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재정 확충도 도모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포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은 2006년 고강도 부동산 실사를 진행하면서 당과 군부대 산하 기관, 기업소는 물론 라선시와 개성 및 금강산 특구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실사 대상에 포함시켰음. 또 개인, 기관, 기업소의 토지와 건물은 기본이고 작은 '폐기밭'과 건물의 내부 설비, 수목의 숫자까지 세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새로 제정된 물자소비법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강력한 소비 억제와 '사재기' 등의 시장적 요소 퇴출을 겨냥하고 있는 듯함. 어차피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어려운 터라 공장이나 기업소에서의 효율적 물자 사용을 유도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해 물자난을 완화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아울러 일부 축재계층에서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사재기'를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 이와 함께 종합설비수입법도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FAO, 2010년 봄 北 현지서 작황 조사(12/15, 미국의소리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4~5월께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
- 12월 초 평양을 방문한 다니엘레 도나티 FAO 긴급활동국 아시아 담당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4월에서 5월쯤이면 논밭에 작물들이 충분히 자라 추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북한에 보내 현지 농작물 실태와 생산성, 수확량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는 "북한 당국도 작황 조사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언

라. 군사 관련

● **북한 올해 무기수출 2억달러 육박, 작년 2배(12/17, 동아일보)**

- 북한이 올해 2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 북한은 국제사회가 올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채택해 강력한 무기 수출 단속에 나서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청송연합' 등을 전면에 내세워 무기 판촉활동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대북 정보소식통들은 "올해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는 2008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었다"고 소개, 북한의 무기 수출액은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가동된 이후 점차 줄어



들어 2007년 4960만 달러로 추산됐으나 2008년부터 다시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 수출 대상국을 과거의 중동 국가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으로 다변화했으며 수출품목도 방사포, 함정, 탄약 등 재래식무기와 함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로 확대했다고 소식통들은 전언
-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 방식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의 무기 수출을 관장하는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는 청송연합을 전면에 내세워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한편 유엔의 의심을 받는 산하의 주요 수출회사들에 과거와 다른 가짜 이름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보도

● 北, 과거에도 항공기로 무기 수출(12/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산 무기를 실은 그루지야 국적기가 태국에 억류된 가운데 북한이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항공기로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군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
- 3년 전까지 북한군 총참모부의 병기국 무기호송대에서 복무했다는 탈북자 강모씨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각종 미사일과 군수품목을 평양 인근 순안공항으로 운반했다”면서 “순안비행장으로 화성미사일(스커드미사일의 북한 내 명칭)도 많이 나가는데 순안비행장까지 간다는 것은 그쪽(해외)으로 실어 내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
- 강씨는 또 해외 무기수출을 주도하는 부서는 노동당 99호실이고, 무기가 해외로 운반될 때마다 이곳 실무자들이 호송대로부터 무기를 넘겨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RFA는 전언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내년 쉬는 날 68일, 올해보다 ‘딱딱’(12/20, 연합)

- 북한에서도 2010년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쉬는 날이 올해보다 나흘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평양출판사 발간 내년도 북한 달력에 따르면 ‘주체 99년(2010년)’의 쉬는 날은 공휴일 17일과 일요일 51일을 합쳐 모두 68일. 이는 공휴일 20일을 포함해 72일을 쉬던 올해보다 4일이 적음.
- 주5일제 근무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토요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토요일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사업 단위별로 ‘생활총화(비판회의)’를 가짐.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도입된 것으로, 자아비판을 하는 것도 이때임. 그러나 국경일 등 법정 공휴일은 우리보다 훨씬 많음. 설과 추석 연휴, 7일의 법정 공휴일을 합쳐 모두 13일을 쉬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법정 공휴일은 모두 18일에 달함. 설과 추석 등 고유 명절을 빼면 북한의 공휴일은 모두 정치적 색채가 짙은 것이 특징



● 北 화폐개혁 내부혼란은 없어(12/20, 환구시보)

-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후 이미 새 화폐가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 큰 내부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
- 20일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주재 특파원이 평양의 외국인 시장인 통일시장을 비롯해 시장과 상점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화폐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
- 환구시보는 물가가 일부 오르긴 했지만 사재기 현상은 빚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공급물량도 충분히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소개, 환구시보는 북한 사람들이 월급액수는 과거와 비슷하고 물가도 조금 올랐지만 화폐가치가 100배가 커지는 바람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 화폐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언
- 한편 신문은 북한이 연말부터 2010년 2월까지 외국인의 관광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매년 있는 조치로 화폐개혁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중 무역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

● 북한판, 뉴타운 만수대거리(12/20, 연합)

- 2012년까지 평양에 10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북한 당국이 최근 ‘북한판 뉴타운’의 시범 성격을 띠는 만수대거리 재개발을 끝마쳐 관심을 끌고 있음.
- 우리의 국회의사당 격인 만수대의사당 근처의 만수대거리는 고구려 시대 성문인 보통문(普通門)에서 만수대의사당까지 이어지는 500여 m 도로의 양쪽 지역을 말하며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음. 북한 수도건설국은 2008년 7월 이 일대 주택 600여 세대를 모두 허물고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에 나섰다. 1960년대에 지어진 5층 이하의 낡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던 이 지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북한 지도부의 비상한 관심 속에 착공 1년 만인 지난 9월 800여 세대의 번듯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 대북 소식통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만수대거리의 재개발을 위해 보통문 바로 옆 야산에 있던 김 주석의 옛 관저이자 자신의 유년·청년기를 보낸 ‘5호택 관저’를 헐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재개발된 만수대거리는 옥류교 방향의 도로 입구에서 보통문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언
- 소식통들은 “5호택 관저는 주석궁 건설 뒤에는 관리인들만 두고 20여년간 보존돼 왔다”며 “김 위원장이 이를 허물도록 지시한 것은 만수대거리 조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설명, 김 위원장은 완공 직후 직접 이곳을 찾아 “당의 구상과 의도가 반영된 최상급의 현대적 살림집”이라며 치하
- 만수대거리의 아파트 ‘배정’이 최근 끝나 지난달부터 주민들의 입주 시작돼 지금은 거의 마무리됐음. 북한판 ‘뉴타운’에는 기존에 살던 600여 세대가 다시 들어왔고 건설 참여 관계자와 노동자, 체육인 등



각종 공로를 인정받은 시민들이 나머지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고 함. 북한은 이번에 새집을 얻게 된 기존 주민이나 추가로 입주한 사람들이나 모두 ‘공짜’로 새집에 들어왔다고 선전

● **북한 신종플루 추가 발병 없다(12/12,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이 평양과 신의주에서 9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인정한 이후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인도 뉴델리에 있는 WHO 동남아시아 총괄사무소 수전 웨스트맨 박사는 VOA와 전화에서 “12월 8일 현재 WHO에 새롭게 보고된 신종플루 감염 확진 사례는 없다”며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백개의 신종플루 표본이 검사됐으며 병원체 유전자 판별을 위한 검진 시약(Primer) 상태가 좋다”고 밝힘.

● **北, 사리원에 ‘열사릉’ 추가 건립(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우리의 현충원에 해당하는 열사릉을 추가 건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통신은 “정방산의 풍치 수려한 곳에 자리 잡은 열사릉에는 조국 해방과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한 40여명의 열사들의 유해가 안치됐다”고 전언
- 통신은 이곳에 안장된 인사로 항일열사 안형익, 허상검, 최을암, 홍종국과 황해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지배인 최기춘 등을 소개
- 열사릉은 평양, 함흥, 평성 등지에 있으며 가장 등급이 높은 곳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모 김정숙 등 항일빨치산 출신들을 주로 안장한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임.

● **北 화폐개혁 후 아사자 나와(12/18, 데일리NK; NK지식인연대; 자유북한방송)**

- 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식량 유통이 크게 줄어들면서 양강도 농촌에서 아사자가 처음 나왔다고 ‘데일리NK’가 18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주장, 데일리NK는 “양강도 갑산군에서 국수장사를 하던 신모 씨가 11살 난 딸과 함께 자기 집에서 허약으로 사망했다”고 보도, 이 매체는 신 씨 사망을 보고받은 양강도당이 주민 동요를 우려해 일대 극빈층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소개
- 한편 ‘NK지식인연대’도 “화폐개혁 후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온 서민층에서 직장에 복귀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북한 상황을 전언, 이 단체는 또 사채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들이 화폐개혁 때문에 시장에서 밀려나고 공산품, 식량 등 현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 시장에서 득세하고 있다고 소개
- 자유북한방송은 화폐 개혁 이후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신소 공용전화 요금이 분당 구권 3원에서 신권 17전으로 사실상 6배나 올라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



- **北인구, 1993년 이후 300만명 늘어(12/18,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의 전체 인구가 2천405만여명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인구기금(UNFP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
 - 18일 VOA가 입수한 UNFPA의 ‘2008 북한 인구조사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총인구는 2천405만2천231명(작년 10월 기준)으로 1993년의 직전 조사 때보다 약 300만명 늘어나 연평균 0.85%의 증가율을 보임. 성별로는 남성 1천172만838명, 여성 1천233만393명으로 여성이 51.3%였음.
 - 65세 이상은 전체의 8.7%로 ‘노령화 사회’ 기준(7%)을 넘겼고, 출산율은 가입 여성 한 명당 2.0명으로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미달,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은 14명(1천명 기준)에서 19명으로 35.7%, 산모 사망은 54명(10만건 기준)에서 77명으로 42.6% 증가, 이에 따라 평균 기대수명도 72.7세에서 69.3세로 3.4세 낮아짐.
 - 또 북한 인구의 60%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은 평양(325만5천288명)이 유일, “11년 무상 의무교육의 결과로 10세 이상 북한 인구가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5세부터 16세까지 아동의 학교 출석률도 100%로 나타났다”고 밝힘.
 - 이번 인구조사는 2008년 10월 1~15일 보름간 UNFPA의 후원 아래 실시됐으며, 실제로 현장 조사 및 지도 요원 4만2천여명이 투입돼 전 가구 방문 형식으로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수, 개인소득 등 53개 문항을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설명, 북한의 김창수 중앙통계국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15년 전의 1차 인구조사 때 다뤄지지 않았던 주택, 장애, 교육, 이주, 경제활동, 모성사망 등의 항목이 이번에 포함됐다”면서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인구조사였다”고 평가
- **北, 금강산 ‘별금강’ 등 천연기념물 추가 등록(12/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올해 내각 결정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의 명승지 ‘별금강’을 비롯해 동굴과 나무 등 수십 개 대상을 천연기념물로 신규 등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별금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973년 8월 금강산을 방문했을 당시 “이 곳을 잘 꾸려 관광객과 휴양생들이 휴식하도록 한 뜻 깊은 곳”이라며 “320m의 산 정점에 100m 둘레의 작은 못이 있고 20m 높이의 기묘한 벼랑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어 특이한 자연경관을 펼쳐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北당국, 14일부터 사흘간 시장운영 중단(12/15, 오늘의 북한소식)**

 - 화폐개혁과 국정가격 공시에도 불구하고 각종 물품의 시장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북한당국이 14일부터 사흘간 시장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15일 보도, 소식지는 “화폐교환조치 이후 시장 가격이 크게 요동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당국에서는 14일 오후부터 3일간 시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물가를 새 국정가격으로 조정한 뒤 시장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

- 소식지는 “현재 국정가격이 공시됐지만 국가가격제정국에서는 전국 지방의 실태 자료와 주민 여론동향 등을 고려해 새 가격을 다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
-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각급 시장 앞에 공시한 국정가격표와 관련해 kg당 쌀 22~23원, 옥수수 8원, 콩기름 50원, 돼지고기 45원, 설탕 40원, 두부 1모에 3원 등이라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및 유엔안보리 관련

● 美재무부, 北금강은행 주의스트 추가(12/20, 연합)

-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이 거래를 주의할 북한 은행 리스트에 금강은행을 추가, 이에 따라 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들에 주의를 요구한 북한 은행은 총18개로 늘어나게 됐다.
-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의 불법금융 행위 개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문에 포함된 북한 은행 리스트에서 금강은행을 추가
- 앞서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이 권고문을 통해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후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나 제3자를 통한 자금이전, 반복적인 계좌이체 등 변칙, 위장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음.

● 유엔, 對北인권결의 공식 채택(12/20, 연합)

- 유엔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한 인권결의를 공식 채택, 이날 표결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3개국은 기권
- 유엔이 11월 19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대북 인권결의를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를 채택한 셈이 됐다.
-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泰전투기가 北 수송기 강제 착륙시켜(12/17, 러시아 코메르산트)

- 북한 무기를 수송한 그루지야 국적의 일류신(ИЛ)-76 화물기가 재급유(給油) 때문에 태국에 기착했다가 억류된 게 아니라, 태국 영공에 진



입한 뒤 태국 전투기들에 의해 강제 착륙한 것이라고, 러시아의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17일 보도

- 이 신문은 “평양에서 출발한 II-76기가 지난 12일 태국 영공에 진입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태국 전투기 2대가 외국 정보기관의 귀뜸에 따라 II-76기에 착륙을 지시해 방콕 돈므앙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
- 이는 II-76기가 재급유와 바퀴점검을 위해 방콕에 기착한 것을 억류했다는, 애초 태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다른 것이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제 무기를 외국에 팔려던 이 화물기가 애초 운행상의 재급유 예정지인 스리랑카에 가기 전에 태국 영공에서 물리적 으로 차단됐음을 시사

● 유엔 北무기 압류조치 긍정 평가(12/16, 연합)

- 태국 정부가 북한제 무기를 신고 가던 화물기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또 태국 정부가 조사를 끝낸 뒤 제재위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임.

나. 북·미 관계

● 美, 泰압류 북한 무기 행선지는 중동(12/19, 연합)

- 태국 정부가 최근 압류한 북한산 무기의 행선지가 중동 지역이라는 분석이 미국 정보당국에서 18일(현지시각) 나왔음.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미국과 외국 (정보) 기관 사이의 팀워크 덕분에 중동으로 향하던 북한 무기를 압류할 수 있었다”고 밝힘. 이 발언은 그간 논란이 돼온 북한산 무기의 행선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첫번째 공식 발언임. 이 경우 그동안 행선지로 거론돼온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 수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국가보다 이란이 부상하게 되었음. 또 무기압류 과정에서 이뤄진 미국의 역할을 당국이 공식 시인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음. 블레어 국장은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의 협력이 강화된 점도 한몫 했다고 평가

● 美, 2010년 상반기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12/18,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 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면 외교관계 수립문제 등을 협의할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전언, 이들은 “연락사무소는 북미 공식 수교 이전에 설립하는 것으로 대표부보다 급이 낮다”면서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국교수립이나 평화협



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

- 이들은 평양사무소 개설 시기와 관련, “북한은 현재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연락사무소도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방북 美기업가대표단, 북미간 평화로운 관계 희망(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미국기업가대표단이 북미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 전직 미국 공군 장성인 찰스 보이드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은 12월 14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임.
- 통신은 보이드 단장이 주체사상탑을 참관하고 감상록에 “미·조(북)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남겼다고 보도
- 대표단원들은 또 “앞으로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쌍무경제관계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려 한다”, 고 언급했고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참관하고 “조선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며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큰 나라”라며 “조선의 교육수준과 지하자원 등은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언
- 미 대표단은 방북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만났으며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평양교예단 공연도 관람

● **북미 과학자들, 폭넓은 교류 다짐(12/17,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미국 과학자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피터 아그리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회장이 “(북한 과학자들과) 의학, 에너지, 공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다짐했으며 과학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RFA에 따르면 12월 10~14일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 대표단의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한 아그리 회장은 이번에 미 과학자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 연구소와 실험실, 병원 등을 방문해 의학, 생물학, 에너지 개발, 공학,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과학 교류를 경험했다”고 밝힘.

● **보즈워스, 미북관계 미래 비전 전달(12/17, 연합뉴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6일 국무부에서 가진 평양 북미대화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내가 직접 전달했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에서의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



- 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북측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설명
- 보즈워스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친서 여부에 대한 즉답을 비켜갔지만,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보즈워스 대표 의 브리핑 후 가진 별도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편지가 있었으며, 보즈워스 대표가 그것을 김정일 위원장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북한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식 확인
- 보즈워스 대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향후 활동과 관련,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앞으로 수주동안 당사국들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이니셔티브를 가질 것”이라며 “이 과정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美, 태국 北무기억류, 안보리 제재위 보고(12/15, 연합)

- 미국은 14일 북한산 무기 수송기에 대한 태국 당국의 억류 조치와 관련,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안보리 산하 제재위에 사실상 회부할 방침임을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조치는 이번 사건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위에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이 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언급
-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무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조사하고 억류할 것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한 태국 정부를 기린다”면서 “거듭 태국 정부의 행동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힘.
- 그는 압수된 무기의 목적지와 관련, “알지 못한다”면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이들 선적된 무기가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도 그 조사의 일부분”이라고 답변

다. 북·중 관계

● 中자칭린, 북중 고위급 교류에 만족(12/19, 조선중앙통신)

-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완수 서기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자칭린은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중조(북중) 친선관계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며 “우리는 중조 사이에 고위급 왕래가 많이 진행되고 경제무역 협조와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 그는 또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끊임 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2/1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7일 최근 나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입박설을 우회적으로 부인,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답변

● **北·中 치안총수 회담(1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중국 명젠주(孟建柱.62) 공안부장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북한의 인민보안상과 중국 공안부장은 모두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직책임.
-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음.
- 이번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인민보안성 대표단원과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 중국 측에서 명홍웨이(孟宏伟) 공안부 부부장 등이 배석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외무부, 북핵 협상 긍정적 변화 주목(12/18, 연합뉴스)**

- 러시아 정부가 최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외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이며, 바람직한 진전이 있는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
- 특히 브리핑에서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6자 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정치적, 외교적 해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며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

마. 북·일 관계

● **日, 국제경기 유치 자격 없다(1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일본 정부가 내년 2월 도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 선수권대회 본선에 참가할 북한 여자대표팀의 입국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난
- 조선신보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여자축구팀의 입국을 당연히 반대한다”는 일본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의 발언을 거론, “체육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개입”이라고 비난, 신문은 특히 “일본은 국제적인 경기를 초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일본이 국제대회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



- **北신문, 日에 과거청산 위한 배상 주장(1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언급하면서 배상을 강조, 이 신문은 ‘철면피성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오늘 그에 대해 성근(성실)하게 반성하고 배상하는 것은 하나의 국제적 흐름”이라며 “이에 배치되게 과거청산을 한사코 외면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비난

바. 기타국가 외교 관계

- **北, 프랑스 문화협력사무소 개설 동의(12/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프랑스가 제안한 평양 문화협력사무소 개설에 동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 통신은 “프랑스 측은 대통령 특사의 조선 방문 결과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평양에 프랑스 협조 및 문화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을 통보해왔다”며 “우리는 프랑스와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서 사무소 개설에 동의했다”고 보도
- **北외교관, 스웨덴서 담배 밀수 혐의로 기소(12/15, 미국의소리방송)**
 - 스웨덴에서 최근 담배 밀수 혐의로 체포된 북한 외교관 2명이 16일 기소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5일 보도, 스웨덴 세관 대변인은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들 북한 외교관은 강선희(56)와 박응식(54)이며, 이들이 16일 기소될 예정이라는 것을 스톡홀름시 검찰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소개,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인 이들은 11월 18일 핀란드 헬싱키를 출발, 러시아산 담배 23만 개비를 차 안에 숨겨 반입하려다 스톡홀름 세관에 적발되었음.

3. 대남정세

- **정부,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 지원(12/19, 연합)**
 - 정부는 개성공단에 소방차 5대를 지원하고 정식 소방서를 신설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19일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이날 “최근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소방차가 3대에 불과한 개성공단에 5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컨테이너식 가건물 형태인 현 소방서도 정식 소방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 이어 “소방시설 확충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60% 이상이 섬유와 봉제 등 화재에 취약한 업종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식 소방서가 신설되면 현재 21명인 소방서 근무인력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소개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소방차 추가지원과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51억여원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소방차 5대를 확보, 가급적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 현지에 보낼 방침



- **北, 신종플루 치료제 전달에 “상당히 고맙다”(12/18, 연합뉴스)**

 - 북한에 신종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전달한 남측 인도단이 1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 단장을 맡은 김영일 통일부 인도지원과장은 출입사무소 입경장에서 “북측은 남측의 신속한 치료제 제공에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밝힘.
 - 김 단장은 이어 “북한은 경험이 많은 남측에서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남측 상황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고 언급
 - 인도단은 오전 10시께 북측 인수요원들을 만나 1시간30분 가량 북측 냉장차량 11대에 타미플루 40만명분과 리렌자 10만명분을 옮겨 실었음. 남측 인도단에 포함된 의료진은 북측 보건 분야 관계자에게 신종플루 치료제 사용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30분 넘게 설명, 남북한 인도·인수단은 지원물자 전달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개성자남산 여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인도·인수증을 교환
 - 이 자리에서 북측은 치료제를 시도별로 분배하겠다고 남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당초 북한에 치료제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북한이 30일 이내 분배 내역서를 남측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었음.
 - 앞서 정부는 이번 대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78억원 사용을 의결했고 이번 지원품목에 함께 포함된 10억원 상당의 손세정제는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1월 중순께 북한에 전달할 예정임.

- **北, 외국인 통제설 속 남측단체에 초청장(12/1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는 23일 방북하는 우리측 단체에 북한이 초청장을 발급한 것으로 16일 확인됨.
 -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23일 중국을 통해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우리측 단체에 북한이 초청장을 발급했다”며 “정부는 현재 이 단체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軍통신·개성택아소 공사 90% 이상 끝나(12/14, 연합뉴스)**

 - 개성공단내 택아소 건설과 남북간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 통신선 현대화 공사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돼 예정대로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14일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성공단 택아소 건립과 남북간 군 통신선 현대화를 위한 공사 모두 현재 90% 이상 끝난 상태”라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계획대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보즈워스, 北에 우라늄농축 우려 전달”(12/15)

- 지난 8~10일 북한을 방문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기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15일 알려짐.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 당정회의에서 “보즈워스 대표와 북한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관련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함.
-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북한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식 전달함에 따라 향후 북핵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은 지난 9월4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위 본부장은 또 “보즈워스 대표가 (한국에 되돌아와) 기자회견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번 사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 명백하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한측이 미국의 우려 표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함.
- 위 본부장은 이어 태국 정부의 북한제 무기 수송기 억류사건과 관련, “태국 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북한산이건 아니건 무기 자체가 북한을 경유해 나오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어프로치가 온당하다”고 강조함.
- 한편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북한의 화폐개혁에 따른 내부 동요와 관련, “현금을 많이 가진 이들은 동요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은 애초에 많은 돈이 없어서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홍 차관은 이어 북한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주의깊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함. 홍 차관은 또 화폐개혁의 목적에 대해 “2012년 강성대국을 만들기 위한 자금확보용이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 “6자회담 재개 시기 미정”(12/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8~10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4일 “북한이 언제 6자 회



답에 복귀해 비핵화 협상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 시간표는 없다”고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러시아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 등과 방북결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우리 파트너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당사국들도 또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기본적으로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 ‘선(先) 평화조약, 후(後) 핵 폐기’라는 북한 입장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방북 후 한국, 중국, 일본에 이어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찾은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 성과와 관련 “러시아와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또 9.19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재개하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지난 12일 태국 당국이 북한산 무기를 선적한 화물기를 억류한 사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1874호를 이행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 보로다브킨 차관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데 만족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산 무기를 수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러시아와 미국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이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서 “9.19 공동성명에 근거해 6자회담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음.
-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라면 북·미 직접 대화는 물론 어떤 식의 접촉도 환영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는 북·미 대화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천명한 데 대해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라고 환영의사를 표명하며 앞으로 사태전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임.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북한과 미국이 이번 접촉을 통해 ‘실무적’ 대화를 나눈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통의 언어를 찾기 바란다”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美재무부, ‘北금강은행’ 주의리스트 추가(12/20)

-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이 거래를 주의할 북한 은행 리스트에 금강은행을 추가함. 이에 따라 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들에 주의를 요구한 북한 은행은 총 18개로 늘어나게 됨.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북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의 불법금융행위 개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문에 포함된 북한 은행 리스트에서 금강은행을 추가함.

● 유엔, 對北인권결의 공식 채택(12/20)

- 유엔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한 인권결의를 공식 채택함. 이날 표결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3개국은 기권함. 유엔이 지난달 19일 제3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대북 인권결의를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해 인권결의를 채택한 셈이 됨.
-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어서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美 “태압류 북한 무기 행선지는 중동”(12/19)

- 태국 정부가 최근 압류한 북한산 무기의 행선지가 중동 지역이라는 분석이 미국 정보당국에서 18일(현지시간) 나왔음. 테니스 블레이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미국과 외국 (정보) 기관 사이의 팀워크 덕분에 중동으로 향하던 북한 무기를 압류할 수 있었다”고 밝힘.
- 이 발언은 그간 논란이 돼온 북한산 무기의 행선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첫번째 공식 발언임. 이 경우 그동안 행선지로 거론됐은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 수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국가보다 이란이 부상하게 됨. 또 무기압류 과정에서 이뤄진 미국의 역할을 당국이 공식 시인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음. 블레이어 국장은 미국내 16개 정보기관의 협력이 강화된 점도 한몫 했다고 평가함.

● 방북 美기업가대표단 “북·미간 평화로운 관계 희망”(12/18)

- 북한을 방문 중인 미국기업가대표단이 북미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전직 미국 공군 장성인 찰스 보이드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임.
- 중앙통신은 보이드 단장이 주체사상탑을 참관하고 감상록에 “미·조(북)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남겼다고 이같이 말함. 대표단원들은 또 “앞으로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쌍무경제관계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힘.

- 대표단은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참관하고 “조선은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며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대단히 큰 나라”라며 “조선의 교육수준과 지하자원 등은 외국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평양방직공장을 둘러본 뒤에는 “발전된 나라들의 큰 기업체들과 견줄만하다”며 “자기 실정에 맞는 경제건설 방식과 방도를 찾고 그를 구현해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조선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주장함. 미 대표단은 방북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을 만났으며 평양산원을 참관하고 평양교예단 공연도 관람함.

● “北 라진·선봉 관광지 개방 검토”<RFA>(12/18)

- 북한이 내년 라진·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함경북도 칠보산과 황해남도 해주, 평양 일부 지역 등을 새로 개방했듯이 내년에도 라진·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고려여행사측은 관광산업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므로 새 관광지 개방과 상품 개발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변화라고 분석함. 카커럴 대표는 올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1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으며 미국과 영국 관광객은 줄었지만 기타 유럽국가의 관광객은 다소 늘었다고 전함. 라선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중순 처음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음.
- 북한은 1991년 라진·선봉 지역을 첫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최근 다시 대외 무역 요충지로 발전시키려고 애쓰고 있음. 북한은 2001년 라진·선봉시의 이름을 현재의 라선 직할시로 변경함.

● 北 “오바마 친서 강석주에 전달”(12/1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친서를 조선(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조선정책 특별대표가 9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에게 전달했다”고 전함. 통신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美, 내년 상반기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12/1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핵 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면 외교관계 수립문제 등을 협의할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



들은 18일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함.

- 이들은 “연락사무소는 북미 공식 수교 이전에 설립하는 것으로 대표 부보다 급이 낮다”면서 “평양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국교수립이나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함. 이들은 평양사무소 개설 시기와 관련, “북한은 현재 6자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찾고 있다”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고 연락사무소도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국무부에서 가진 평양 북미대화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에서 북한과 전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북측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함.
-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미국 국무부는 재미교포 출신인 민간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등 이미 평양사무소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면서 “최근 설립 협의가 급진전하고 있다”고 말함. 북한과 미국 양측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보안문제나 대표부 운영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일제히 부인함. 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브리핑 받았다”면서 “그러나 친서 내용에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잘라 말함. 그는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얘기해줄 수 없지만 95%는 보즈워스 대표가 브리핑한 내용에 다 들어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음.
- 이 당국자는 “지금 북한은 자꾸 포커스를 흐리려고 평화체제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평화체제는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지 갑자기 평화체제 얘기한다고 평화가 오느냐”고 반문함. 청와대 관계자도 “미국이 평양 사무소 개설을 약속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친서라는 것은 대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지 협상에 관한 것을 넣지는 않는다”고 말함.

● “북미 과학자들, 폭넓은 교류 다짐”<RFA>(12/17)

- 최근 미국 과학자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한 피터 아그리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 회장이 “(북한 과학자들과) 의학, 에너지, 공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교류를 다짐했으며 과학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지난 10~14일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 대표단의



단장으로 북한을 방문한 아그리 회장은 이번에 미 과학자들이 “김책 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과학 연구소와 실험실, 병원 등을 방문해 의학, 생물학, 에너지 개발, 공학,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과학 교류를 경험했다”고 밝힘.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그는 2년간의 준비 끝에 이루어진 이번 방북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 과학 교류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함.

-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캐스린 캠블 민간연구개발재단(CRDF) 회장도 “북한의 관리와 과학자들은 미국과 계속 교류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전함. 아그리 회장 일행은 16일 오전(미국 시간) 미 국무부를 방문해 방북 결과를 보고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미·북 과학교류 컨소시엄’은 미국 시라큐스대와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워싱턴 소재 ‘미국민간연구개발재단’의 주도로 2007년 5월 결성됐음.

● “北,과거에도 항공기로 무기 수출”<RFA>(12/16)

- 북한산 무기를 실은 그루지야 국적기가 태국에 억류된 가운데 북한이 이번뿐 아니라 과거에도 항공기로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해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군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함.
- 3년 전까지 북한군 총참모부의 병기국 무기호송대에서 복무했다는 탈북자 강모씨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 동안 각종 미사일과 군수품목을 평양 인근 순안공항으로 운반했다”면서 “순안비행장으로 화성미사일(스커드미사일의 북한 내 명칭)도 많이 나가는데 순안비행장까지 간다는 것은 그쪽(해외)으로 실어 내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함.
- 강씨는 또 해외 무기수출을 주도하는 부서는 노동당 99호실이고, 무기가 해외로 운반될 때마다 이곳 실무자들이 호송대로부터 무기를 넘겨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RFA는 전함.

● “오바마, 김정일에 친서 전달”<WP>(12/16)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personal letter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를 지난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함.
- 워싱턴포스트는 이 서한의 존재가 엄격히 비밀로 유지됐다면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에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이 신문은 보즈워스 대표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번 주 확인했다면서 다만 구체적 내용은 이들이 설명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마이크 해머



- 대변인은 “개인적 외교 서한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말함.
- 앞서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을 마친 뒤 서울에 귀환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감.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북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바로 메시지”라고 언급했고,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친서 전달을 부인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이렇게 임기 초반에 친서를 전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평가함.
 - 이와 관련, 이 신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도 김정일에게 편지를 결국 보냈지만, 북한의 핵 야심을 꺾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친 뒤에나 보냈다고 지적함.
 - 부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말인 2007년 12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히 신고할 경우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에너지 지원을 대가로 핵프로그램을 동결한 (제네바) 합의 이후인 1994년 10월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임.
 - 포스트는 부시 행정부 초반에 김정일을 향해 ‘각하(his excellency)’라는 경칭을 사용할지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면서 서한 발송이 난항을 겪었다는 뒷얘기도 소개함. 이 신문은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이 보낸 친서의 영향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신문은 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은 단순히 북한이 회담을 다시 시작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철회하거나 다른 이득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오고 있다고 전함.

● “北, 美에 대북 제재해제 요구”(12/16)

- 북한은 지난 8~1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짐. 이는 북한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직후 항공기를 이용한 무기수출을 시도하다 태국 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건과 맞물려 주목됨.
-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측이 보즈워스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간 대화가 시작되면 제재가 해제되는 과거의 패턴에서 탈피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행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전반적인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재해제 요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서로의 기본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함. 또 다른 소식통은 태국의 북한제 무기 압류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함.
-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방북기간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회의에서 “보즈워스 대표와 북한간에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 관련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함.
- 미국이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북한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식 전달함에 따라 향후 북핵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은 지난 9월4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농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보즈워스 대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방북 후속협의를 거쳐 15일(현지시간) 오후 귀국한 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방북 결과를 대면 보고했으며 조만간 별도의 언론브리핑을 갖고 방북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클린턴 “태국 北무기 억류 매우 만족”(12/15)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북한산 무기 수송 화물기에 대한 태국 당국의 억류조치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스페인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양의 무기를 탑재한 비행기에 대한 태국 정부의 억류 조치는 유엔 제재 결의를 뒷받침하는 국제적 결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같이 말함.
- 클린턴 장관은 “태국의 조치는 제재 조치가 작동하고 있으며, 제재를 통해서 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뭉쳐서 대응할 때 북한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함.
- 북한의 무기수출 시도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재망을 피해서 해외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은 외화 획득의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기수출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태국의 강력한 조치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그것은 유엔의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함.



● 美 “태국 北무기억류, 안보리 제재위 보고”(12/14)

- 미국은 14일 북한산 무기 수송기에 대한 태국 당국의 억류 조치와 관련,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안보리 산하 제재위에 사실상 회부할 방침임을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조치는 이번 사건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위에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이 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함.
- 켈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무기가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조사하고 억류할 것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한 태국 정부를 기린다”면서 “거듭 태국 정부의 행동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힘.
- 그는 압수된 무기의 목적지와 관련, “알지 못한다”면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며, 이들 선적된 무기가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도 그 조사의 일부분”이라고 답함. 그는 또 ‘이번에 억류된 수송기가 주변 국가를 향해 날아간 것으로 믿고 있다는 태국 정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버마)를 목적지로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태국 정부의 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의한 무기 거래를 우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 사회에 의해 부과된 의무와 한계를 무시하는데 대해 항상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일부는 무기 거래이고, 다른 일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를 그들이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핵프로그램과 국제 사회의 의무 준수를 북한이 점점 거부하는 것의 직접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한편 켈리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에 내정된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전함.

● 美고위관계자 “北무기압류, 6자회담 재개와 무관”(12/15)

- 미국은 14일 북한산 무기를 실은 수송기가 태국 정부에 의해 억류된 사건이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이 미국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 방침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함.
- 이 관계자는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확고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정말 우선 순위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함.
- 앞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어떤 것을 말해주느냐’는 질문에 “국



- 제 사회의 의무를 북한이 점점 더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것 이외에 핵 프로그램과의 직접적인 상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언급, 이번 사건이 북핵 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한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태국에서 억류된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와 관련, “모른다”면서도 “이웃 국가로 향했다는 추측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함. 그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시 미·북 양측이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대화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양해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대해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양자 대화를 가질 장치는 있다”는 원칙적 언급을 되풀이함.
 - 이와 관련, 그는 “6자회담의 맥락에서 핵 이외의 문제에 대해 북한과 얘기할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하지만 그는 “우리는 1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2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우선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함.

다. 중·북 관계

● “北 화폐개혁 내부혼란은 없어” <中언론> (12/20)

-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후 이미 새 화폐가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 큰 내부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했음. 20일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주재 특파원이 평양의 외국인 시장인 통일시장을 비롯해 시장과 상점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화폐를 받기 시작했음.
- 환구시보는 물가가 일부 오르긴 했지만 사재기 현상은 빚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공급물량도 충분히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덧붙였다.
- 환구시보는 북한 사람들이 월급액수는 과거와 비슷하고 물가도 조금 올랐지만 화폐가치가 100배가 커지는 바람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 화폐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 한편 신문은 북한이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외국인의 관광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매년 있는 조치로 화폐개혁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중 무역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 中자칭린 “북·중 고위급 교류에 만족” (12/19)

-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완수 서기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자칭린은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중·조(북·중)



친선관계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며 “우리는 중조 사이에 고위급 왕래가 많이 진행되고 경제무역 협조와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또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 김 서기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자 주석에게 보내는 인사를 대신 전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 방송이 보도함.
- 앞서 김 서기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국전선 대표단은 14일 리진화(李金華)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을 만남.

● 中 “김정일 방중설 들은 바 없다”(12/18)

- 중국 외교부는 17일 최근 나도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을 우회적으로 부인함.
-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방면의 정보를 들은 바 없다”고 말함. 이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은 일단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음.





● 北·中 치안총수 회담(12/17)

- 북한 주상성 인민보안상과 중국 명젠주(孟建柱.62)公安부장이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북한의 인민보안상과 중국公安부장은 모두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직책임.
- 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했을뿐 자세한 회담 내용은 전하지 않았음.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인민보안성 대표단원과 최진수 주중 북한 대사, 중국 측에서 명홍웨이(孟宏伟)公安부 부부장 등이 배석함.
- 통신은 회담에 이어 북한 인민보안성과 중국公安부 사이에 ‘협조물자’ 제공에 관한 조인식이 열렸으며 주 인민보안상과 명公安부장이 문건에 서명했다고 전했으나 ‘협조물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주 인민보안상은 지난 15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떠났으나 정확한 방중 목적과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백학림, 최룡수 등 북한의 인민보안상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례적인 이번 방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주 인민보안상은 앞서 2005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해 조직범죄와 마약거래 등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한 바 있음.

● 中대사 “북·중경협-대북제재는 별개 문제”(12/15)

- 청용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는 15일 “북·중 경제협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별개 문제”라고 밝힘. 청 대사는 이날 서울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중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이웃나라로 양국 간에는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유엔 대북제재 내용과 함께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중국은 대북제재 결의 도출을 위한 토의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모두 분명하게 밝혀왔다”면서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의장국으로서 중국은 물론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함. 청 대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이라고 말함.
- 그는 “6자회담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큰 차원에서 9.19공동성명과 같은 성과도 거뒀다”며 “중국은 올해 몇 차례 북한과 접촉을 통해 중국 측의 입장을 밝히는 등 6자회담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또 “올해 들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세 측면에서 복잡한 요소가 많이 생겼지만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이 6자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이뤘다”며 “스티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및 관련국 순방과 같은 외교적 노력이 6자회담을 재



가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16일부터 시작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공식 방한과 관련, 청 대사는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심화시키고 내실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류우의 전 대통령실장을 중국 주재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중국도 양자관계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아그레망 절차를 빨리 마쳤다”고 말함.
- 류 대사의 아그레망이 한국 정부가 요청한 지 17일 만에 부여된 것에 대해 그는 “아그레망 부여 절차는 보통 1개월이 걸린다”며 “류 대사의 아그레망 절차가 빨리 처리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함. 청 대사는 “한·중 양국은 많은 공통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간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강조함.

라. 일·북 관계

● “日, 대북방침서 납치실행범 인도 삭제”(12/15)

-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내 걸었던 6개항의 대북방침 가운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실행범 인도’를 요구하는 조항을 정권교체 이후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삭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실행범의 인도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납치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납치문제대책본부 회의에서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등 제재 실시’ ‘유엔 및 관계국과의 협조’ 등 6개항의 대북 방침을 정한 바 있음. 이들 방침 가운데 ‘납치 실행범 인도’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귀국’ 그리고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 등 3개항은 지난해 6월 당시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이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절대 필요한 요건”이라고 발표하는 등 대북 협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선으로 여겨져 왔음.
- 그러나 하토야마 정권 취임 이후인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각의결정 문서에서 이들 3개항 가운데 실행범 인도 조항을 삭제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함.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이 일본을 방문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게 “납치 문제 해결에 속박되지 않고 북·일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마. 기타

● “北 화폐개혁 내부혼란은 없어” <中언론> (12/20)

-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후 이미 새 화폐가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등 큰 내부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보도함. 20일 환구시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주재 특파원이 평양의 외국인 시장인 통일시장을 비롯해 시장과 상점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고 새로운 화폐를 받기 시작함.
- 환구시보는 물가가 일부 오르긴 했지만 사재기 현상은 빚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장의 공급물량도 충분히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는 북한 사람들이 월급액수는 과거와 비슷하고 물가도 조금 올랐지만 화폐가치가 100배가 커지는 바람에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 화폐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전함. 한편 신문은 북한이 연말부터 내년 2월까지 외국인의 관광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매년 있는 조치로 화폐개혁과는 무관하다”면서 “북·중 무역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전함.

● “앞으로 남북한·중국 경협시대 열린다” <中학자> (12/20)

- 남북한과 중국이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후쯤이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베이징에서 린민다취(人民大學) 국제관계학원 동아시아연구중심 주최로 열린 ‘동아협력포럼 2009: 동아시아공동체현황과 전망’에서 동북아공동체가 실현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이같이 전망함.
- 류장용 교수는 동북아 안전과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전반적 계획이 실행되면 중국은 30여 년간의 개혁·개방 경험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혁·개방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개성공단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수하고,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공동 생산하는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중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외에 중국에 개성공단 상품을 면세로 판매하는 전용매장 진출을 허용, 남북한과 중국이 2+1의 협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임. 중국은 또 남북한 합작 모델인 개성공단 발전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두만강 개발구와 환황해·보하이만(渤海灣) 경제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류 교수는 말함.
- 류 교수는 이어 중국은 이밖에 북한의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제재를 풀도록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동아시아연구중심이 동아시아공동체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 학자 김진호 단국대교수, 주재우 경희대 교수, 이정남 고



려대 아세아연구소 교수 등 한국인 교수 7명과 중국, 일본 학자 등 50명이 참석, 동아시아공동체 전망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토론을 벌임.

● “伊·獨, 북한에 식량지원” <RFA> (12/19)

- 이탈리아와 독일 정부가 북한에 85만 유로 상당의 식량과 겨울옷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RFA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은 북한에 30만 유로 규모의 식량과 보건 물품을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함.
- 이탈리아는 2003년 북한과 ‘상호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한 후 해마다 많게는 1백만~3백만 유로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지원해 왔음. 독일 정부 또한 북한에 식량개발 사업과 겨울옷 제공을 위해 55만 유로를 독일에 기반을 둔 국제 NGO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과 가톨릭 국제 구호단체 ‘카리타스(Caritas)’에 기부했다고 RFA는 전함.
- 이 중 40만 유로는 저먼 애그로 액션을 통해 북한 내 과수나무 재배와 종자 개발 사업을 위해, 나머지 15만 유로는 카리타스를 통해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식량과 겨울옷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임. 독일은 작년에도 2백만 유로의 기부금을 NG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 과수나무 재배와 옥수수과 감자 종자 개발 등을 지원함.

● 러시아 외무부 “북핵 협상 긍정적 변화 주목” (12/18)

- 러시아 정부가 최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외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이며, 바람직한 진전이 있는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이는 북미 대화를 포함해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일정한 공감대를 표시한 것을 러시아 당국이 고무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됨.
- 전날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도 6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북미 대화 이후(6자회담 재개) 논의에 진전이 있는데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 프로세스 내에서 정치적, 외교적 해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다”며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고



- 있으며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그는 “북핵 문제에서 당사국들은 지역 안보의 필요성뿐 아니라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서로 책임감을 공유하고, 최적의 이해 균형을 찾기 위한 유연성과 자제, 그리고 노련미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위성락 본부장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러시아는 핵 비확산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다”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가 제안한 ‘일괄타결안(그랜드 바겐)’을 확고히 지지해 준 것은 이번 만남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함. 그는 이어 “북미 대화 이후 급진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보지 않으며 이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음.

● “北인구 1993년 이후 300만명 늘어” <유엔보고서>(12/18)

- 북한의 전체 인구가 2천405만여명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인구기금(UNFPA)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18일 VOA가 입수한 UNFPA의 ‘2008 북한 인구조사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총인구는 2천405만2천231명(작년 10월 기준)으로 1993년의 직전 조사 때보다 약 300만명 늘어나 연평균 0.85%의 증가율을 보임. 성별로는 남성 1천172만838명, 여성 1천233만393명으로 여성이 51.3%였음.
- 65세 이상은 전체의 8.7%로 ‘노령화 사회’ 기준(7%)을 넘겼고,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당 2.0명으로 현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미달함. 같은 기간 신생아 사망은 14명(1천명 기준)에서 19명으로 35.7%, 산모 사망은 54명(10만건 기준)에서 77명으로 42.6% 증가함. 이에 따라 평균 기대수명도 72.7세에서 69.3세로 3.4세 낮아짐. 또 북한 인구의 60%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인구 100만 이상은 평양(325만5천288명)이 유일함.
- 보고서는 “11년 무상 의무교육의 결과로 10세 이상 북한 인구가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5세부터 16세까지 아동의 학교 출석률도 100%로 나타났다”고 밝힘. 하지만 탈북자들은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북한의 학교에서는 결석하는 학생이 많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실제로 탈북 청소년 중에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이번 인구조사는 작년 10월 1~15일 보름간 UNFPA의 후원 아래 실시됐으며, 실제로 현장 조사 및 지도 요원 4만2천여명이 투입돼 전 가구 방문 형식으로 나이, 성별, 결혼 여부, 가족 수, 개인소득 등 53개 문항을 조사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함. 북한의 김창수 중앙통계국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15년 전의 1차 인구조사 때 다뤄지지 않았던 주택, 장애, 교육, 이주, 경제활동, 모성사망 등의 항목이 이번에 포함됐다”면서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인구조사였다”고 평가함.



● 北, 프랑스 문화협력사무소 개설 동의(12/17)

- 북한이 프랑스가 제안한 평양 문화협력사무소 개설에 동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통신은 "프랑스 측은 대통령 특사의 조선 방문 결과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평양에 프랑스 협조 및 문화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을 통보해왔다"며 "우리는 프랑스와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서 사무소 개설에 동의했다"고 전함.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11월 방북한 자크 랑 하원 의원은 16일 하원 외교위에 출석해 평양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프랑스는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한다"며 북한에 실무문화협력 사무소 개설을 제안했다고 공개함.

● “압류된 北무기에 핵무기.WMD 없어” <태언론>(12/16)

- 태국 당국이 그루지야 국적의 화물기에서 압류한 북한산 무기에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태국 현지 언론인 더 네이션이 고위 안보 소식통들을 인용, 16일 보도함. 태국 안보 소식통들은 압류된 무기에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북한산 로켓 발사대와 러시아산 로켓 추진식 폭탄 등이 확인됐다고 밝힘.
- 소식통들은 북한에서 생산된 다연발 로켓 발사대(M-1985형) 2대와 20여개의 240mm 로켓, 러시아산 로켓 추진식 폭탄 등이 억류된 화물기에 실려 있었다고 말함. 145개의 밀폐 용기와 박스에 포장된 채 화물기에 실려 있던 40t가량의 무기는 총 6억바트(약 21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지난 12일 돈 므양 공항에 재공유를 위해 착륙한 화물기를 억류한 뒤 화물기에 적재돼 있던 북한산 무기를 압류, 이 나라 중앙부의 나콘사완주(州) 타크리 공군 기지로 이송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음. 압류된 무기의 처리 방향과 관련, 파니탄 와타나야곤 태국 정부 대변인은 전량 폐기할 것이라며 “태국 정부는 압류된 무기들을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유엔에 자금을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힘.
- 태국 당국은 또 실제 화물주와 최종 목적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억류된 승무원들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태국 정부는 현재 억류된 승무원 5명의 구금기간을 12일 연장해 화물기 수송 경위와 최종 목적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경찰 소식통은 “태국 경찰이 법원에 승무원들의 구금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태국 정부 입장에서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함.
-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는 태국 정부의 화물기 조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태국 정부가 제재위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련 협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UAE에 압류된 북한무기 어떻게 처리됐나>(12/14)

- 북한제 무기 35t을 운송하던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억류되면서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에 압류됐던 북한 무기의 처리 결과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음. 호주 선적 정기 컨테이너선 ANL 오스트레일리아호(4만7천t급)는 북한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 10대 등을 신고 이란으로 향하다 지난 7월 22일 UAE 코르파칸항에서 UAE 당국에 적발됐음.
- 여기엔 금수 품목인 122mm 로켓용 추진 폭탄 2천30개와 전자 회로, 로켓용 고체연료 추진제 등이 다량 포함돼 있다고 전해짐. 밀수품들은 밀폐 용기에 담겨 겉에는 ‘석유굴삭용품’이라는 허위 제품 설명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이 무기들은 그러나 현재까지도 UAE 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UAE 관리들은 압류된 북한 무기의 폐기 절차를 밟기 위해 UN 제재위원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3일자 신문을 통해 전함. 유엔 결의안 1874호 14조는 ‘금지 품목을 발견했을 경우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하고 검색, 화물 압류, 처분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태국 당국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북한무기 적재 화물기의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14일 밝혔지만 UAE 당국은 당시 무기 압류 뒤 ANL호 승무원들을 구금하진 않았음. 이는 ANL호가 정기 컨테이너선으로, 북한 무기 수송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북한 무기의 화물 운송을 담당했던 이탈리아 운송업체 오티(Otim) 사도 의뢰받은 화물이 북한 무기였다는 점을 사전에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 오티 사의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지난 8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중국에서 이란까지 운송을 의뢰받았을 뿐”이라며 “컨테이너는 남포항에서 출발할 때부터 원래 봉인돼 있었기 때문에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힘. 태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문제의 수송기를 억류하고 북한산 무기들을 압류한 만큼 압류 물품들의 처리 과정도 유엔과 국제법에 따를 것으로 예상됨.
- 타니 텅파크디 태국 외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언론을 통해 “승무원 조사 등에 외국 공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태국 정부는 압류한 무기와 수송기를 영구 압류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국제법의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泰, 北 무기 수송 승무원 구금 연장(12/14)

- 태국 법원은 14일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t을 운송하다 당국에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12일 연장함.
- 더 네이션 등 태국 신문과 외신들에 따르면, 최종 목적지가 우크라이나였던 이 북한산 무기 중 일부는 스리랑카와 중동에 갈 화물이었으며 억류된 일류신-76 화물기는 과거에도 3~4차례 북한으로부터 비슷한 화물을 운송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음.
- 재급유를 위해 지난 12일 태국 돈 므앙 공항에 착륙한 뒤 불법 무기 운송 혐의로 억류된 화물기에는 벨라루스 출신 조종사 미카일 페투코와 카자흐스탄 출신 승무원 4명 등 5명이 탑승하고 있었음.
- 풍사팻 풍차른 태국 경찰 대변인은 “추가 조사를 위해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 기간을 12일 연장해야 한다는 경찰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구금 기간은 최장 84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힘.
- 태국 주재 카자흐스탄 대사관은 이날 200만바트(약 7천만원)의 공탁금을 내고 승무원 5명의 보석을 신청했지만 태국 법원은 이를 기각함. 승무원들은 13일 경찰 조사에서 비행 일정에 대해서는 자백했지만 화물기에 원유 시추 장비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무기 운송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음.
-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출발, 북한에 도착한 뒤 화물을 실었고 다시 북한을 떠나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아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밝힘. 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동안 스리랑카와 중동 지역에서 화물의 일부를 내려놓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함.
- 타월 플린스리 태국 국가보안회의 사무총장은 “승무원들이 화물의 최종 목적지가 스리랑카 콜롬보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이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확인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함.
- 조종사인 페투코는 과거에도 이번과 같은 화물을 3~4차례 수송한 바 있다고 진술해 북한산 무기가 화물기를 통해 여러 차례 해외로 판매됐을 가능성을 높였음.
- 태국 당국은 화물기에 적재돼 있는 북한산 무기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5일 무기 전문가들이 화물들을 정밀 조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파니탄 와타나야곤 태국 정부 대변인이 밝힘.
- 억류된 화물기에는 미사일과 대공화기 발사대 등이 적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운용하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 타격용 미사일인 ‘K-100’이 압류된 화물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당국에 압류된 무기의 목적지가 이란일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무기가 나중에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함.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화물기가 스리랑카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압류된 무기가 어떤 용도로 수송되고 있는지와 테러 활동과 관련됐는지 등은 아직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국방지침’ 추진 배경과 전망>(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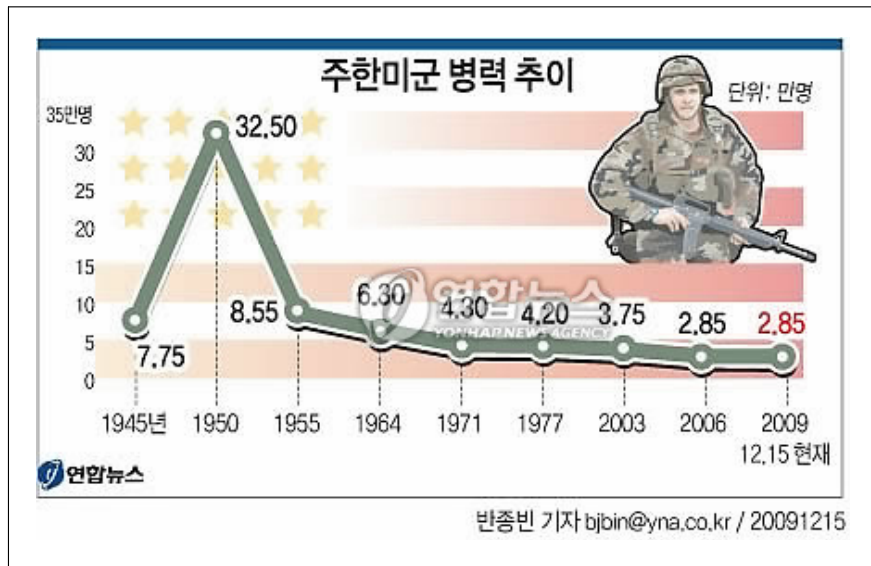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이 내년 중으로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은 미래 국방협력 수준을 한단계 격상하고 확고한 한·미 동맹과 방위공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됨. 양국의 국방지침이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한·미동맹 관계의 수준과 폭을 새로운 미래에 걸맞도록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향을 담은 ‘총론적인 문서’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임.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방지침 제정 문제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짐. 당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비전은 총 10개 문단으로 구성됐으며 양국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전략적 마스터플랜’이었음.
- 양국 국방부 실무자들은 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국방당국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서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임. 실제 실무선에서는 한·영문을 합쳐 10쪽 분량의 이 지침을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해왔음.
- 하지만 단순한 군사차원을 넘어 포괄적인 국방협력 분야까지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정부 관계자들은 국방지침이 지난 1996년 미·일간에 체결됐던 신(新) 방위협력지침과 유사한 것으로 양국의 동맹협력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방지침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과 핵 확장억제 구현 의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짐. 이들 사안은 양국 동맹의 핵심 사안으로 또 다른 반세기 동맹관계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음.
- 오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미 연합군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에 따라 때론 독자적으로, 필요시에는 연합작전을 펼치게 됨. 이 공동작전계획이 수립되면 기존 계획됐던 유사시 미군 증원계획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바뀌는 미래 전쟁 양상에 맞춰 증원전력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임.
- 이에 일각에서는 전시 증원군이 제때에 보장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감을 가져왔고, 미측도 이런 우려감을 충분히 인식해 왔음. 국방지침에



증원전력 보장과 핵 확장억제 구현의지를 명시하는 것도 미국의 이런 인식이 반영됐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정상회담에서 내년부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한 것도 국방지침 제정 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양국은 내년 1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2+2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는 한편 국방지침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15일 “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체계로 협력할지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국방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말함.

● 샤프 “주한미군 해외배치 준비 필요”(12/15)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한·미간에 합의된 전략적 동맹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의 해외 배치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한·미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세계에 배치(regionally engaged and globally deployed)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이는 그동안 미국 측에서 언급해 왔던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주목됨. 그는 “이런 일(주한미군의 해외배치)이 당장(today) 일어날 준비를 우리는 갖추지 못했다”고 말해 당장 주한미군의 해외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다만 “(해외배치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는게 아니며, 한국으로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면서 “(해외에 배치되는 주한미군)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있고, 배치가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고 말함.
-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방한시 주한미군의 파병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고,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도 수년 내 주한미군 병력의 해외 배치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샤프 사령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북한제 무기 35t을 신고 운항중 태국 당국에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 문제와 관련,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정말 요구한다”면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도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대로 북한의 무기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사항이라면서 언급을 피함. 이와 함께 그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군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서울에 피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군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포대를 운영중”이라면서 “북한은 핵 능력 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이어 비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면서 “향후 수개월 내에 어떻게 될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 밖에 샤프 사령관은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군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미국 측의 변함없는 추진 방침을 거듭 확인함. 그는 “전작권 전환이 결코 (한·미 양국군의) 독립적인 작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하나의 작전계획이 있을 것이며, 동맹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그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과 관련, “작계 5027을 매년 계속 연습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도 확인함.

나. 한·중 관계

● “앞으로 남북한·중국 경협시대 열린다” <중화자>(12/20)

- 남북한과 중국이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시대가 앞으로 10년 후쯤이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베이징에서 런민다쉐(人民大學) 국제관계학원 동아연구중심 주최로 열린 ‘동아협력포럼 2009: 동아공동체현황과 전망’에서 동북아공동체가 실



- 현되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음.
- 류장용 교수는 동북아 안전과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전반적 계획이 실행되면 중국은 30여 년간의 개혁·개방 경험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혁·개방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개성공단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전수하고,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공동 생산하는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중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외에 중국에 개성공단 상품을 면세로 판매하는 전용매장 진출을 허용, 남북한과 중국이 2+1의 협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임.
 - 중국은 또 남북한 합작 모델인 개성공단 발전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두만강 개발구와 환황해·보하이만(渤海灣) 경제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류 교수는 말했음. 류 교수는 이어 중국은 이밖에 북한의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제재를 풀도록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 정총리, 習부주석에 남북자 문제 배려 당부(12/17)

-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방한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과 회담을 개최하고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 북핵문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함.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군포로와 남북자 문제를 해결을 위해 중국이 기울여준 노력을 평가하고, “국군포로와 남북자 가족이 원래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국측이 관례대로 소재 확인과 조기 송환 등 앞으로도 각별히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함.
- 이에 시진핑 부주석은 “중국 정부의 입장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총리가 표명한 관심을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변함.
- 정 총리는 또 ‘동북공정’ 등 한중 역사 문제와 관련, “역사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함. 시진핑 부주석은 이에 대해 “2004년 맺은 양해사항에 따라 정치 문제와 역사연구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문제가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해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피력함.
- 또 한국산 테레프탈산(TPA)에 대한 반덤핑 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으며, 시진핑 부주석은 “이 문제의 조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의 관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총리의 말씀을 유념하겠다”고 밝힘. 아울러 정 총리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최근 미·북 대화를 계기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중국측이 의장국으



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고 시진핑 부주석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함.

다. 한·일 관계

● 21일 서울서 한일 FTA 협상재개 실무협약(12/16)

- 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문제를 다룬 제4차 실무협약이 21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힘. 양국은 FTA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해 양국내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산업 협력 등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임. 우리 측에서는 이운영 외교부 FTA 정책국 심의관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키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 한·일 FTA 재개를 위한 실무협약은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과장급 회기가 두 차례 있었고 올 7월 수석대표를 심의관급으로 격상해 세번째 회의를 열었음.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이듬해 11월까지 6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제조업과 농업 개방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중단됐음.

● 李대통령 “내년 한일관계 도약의 계기로”(12/15)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내년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서로 노력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협력위원회 차세대 지도자 교류사업차 방한한 와타나베 히데오(渡邊秀央) 개혁클럽 대표 등 일본 국회의원 5명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함.
-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젊은 인재들의 인적, 문화적 교류가 중요하다”면서 “양국 관계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젊은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앞서 달라”고 당부함.
-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내년이 양국 우호협력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적,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함. 실제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요즘 양국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 한일 차세대 지도자 교류사업은 양국 협력위원회가 상대국의 미래를 짚어질 중견 정치인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을 상호 초청해 주요 인사



와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인적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임. 이날 접견에는 한일협력위 회장인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일본 국회의원 5명,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박형준 정무수석 등이 배석함.

라. 한·러 관계

● 韓-러 “北, 유엔결의안 준수 선행돼야”(12/17)

-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준수해야만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함.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17일 모스크바 외무부 문화센터에서 6자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준수하지 않는 한 제재 이행은 계속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 8~10일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유엔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선(先) 안보리 결의안 준수 요구는 북한이 국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미국 측 입장과도 같은 것임.
- 러시아는 앞서 태국의 북한제 무기 압류 사건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데 만족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북한산 무기를 수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와 함께 보로다브킨 차관은 “한국과 러시아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 이후 (6자회담 재개) 논의에 진전이 있는 데 대해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6자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함.
- 이날 양국 수석 대표는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안(그랜드 바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보로다브킨 차관은 “모든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그랜드 바겐을 지지한다”며 “러시아는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그는 특히 남·북·러 3각(角) 협력을 언급하면서 북한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과 철도 연결 사업에 러시아는 관심이 있다고 밝힘.
- 위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는 각 당사국의 노력을 긍정 평가했으며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한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의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화 재개 시에 대비해 그랜드 바겐의 구체적인 내용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힘. 그는 이어 “9.19 공동 성명은 비핵화 협상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그랜드 바겐과 9.19 성명은 큰 차이는 없으며 그랜드 바겐은 비핵화 진전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사항이 고려된 일종의 포괄적 로드맵”이라고 설명함.

- 위 본부장은 또 “보즈워스 대표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조급해하거나 초조하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5자(者)는 현재의 트랙을 유지할 것이며 추가 제재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음.

마. 미·일 관계

● 하토야마 “클린턴에 후텐마 이해 구했다”(12/19)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9일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경위를 설명, 기본적으로 이해를 구했다”고 밝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석 중인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일본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함.
- 그러나 클린턴 장관과의 대화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덴마크 여왕이 주최하는 만찬 자리에서 잠시 나는 것이어서, 클린턴 장관이 일본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 취지를 알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함. 통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17일 밤(현지 시각) 덴마크 여왕 주최 만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앉았던 클린턴 장관에게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오키나와 현민의 (중전 미·일 간 합의 재검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함.
- 이어 “미·일 간 합의가 중요하지만 새로운 선택지를 찾는 노력을 시작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함. 지지(時事)통신은 하토야마 총리가 클린턴 장관에게 “미·일 합의가 중요하지만, 합의를 강행하면 결과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이에 클린턴 장관은 “잘 알았다”고 답했다고 하토야마 총리는 설명함. 하토야마 총리는 기자들에게 “미·일 동맹의 중요성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당초 하토야마 대통령은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관련, 이전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생각이었지만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미·일 정상 간 단독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음. 하토야마 총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기후변화)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몇 마디만 건네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짐.



● 美해병사령관 “日정부 결정연기, 불행한일”(12/16)

- 제임스 콘웨이 미 해병대 사령관은 15일 일본 정부가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지역에 대한 결론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함. 콘웨이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 과정에서 “만약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역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게 일본정부의 결정이라면 우리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측면에서 불행한 일”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이 시점에서 이전지역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이전 시기를 더욱 불확실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함.
- 앞서 일본정부는 15일 공동여당 대표급들이 참석하는 ‘기본정책각료위원회’를 열어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이전 지역에 대한 결론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함.

바. 미·러 관계

● 오바마 “러와 新무기감축협정 합의 근접”(12/1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 협정에 합의하는데 매우 근접했다고 18일 밝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후속 협정은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될 것”이라며 “기술적인 세부사항 조율만 남겨둔 상태”라고 말함.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기술적 문제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협정은 이른 시일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힘.

사. 중·일 관계

● <시진핑, 상처만 남은 ‘24분’ 日王 면담>(12/15)

-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우여곡절 끝에 15일 오전 아키히토(明仁) 일왕과 면담함. 시진핑 부주석은 이날 오전 도쿄 시내 황거를 찾아 11시부터 24분간 일왕과 환담함. 시 부주석은 지난달 일왕을 면담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처럼 허리를 땅에 닿도록 굽히지 않았음. 선채로 악수와 함께 목례를 하는 정도였음.
- 일왕은 시 부주석에게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 이해와 우호가 한층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후진타오 주석의 안부를 물음. 시 부주석은 후진타오 주석이 건강하며 현재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번에 이처럼 접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예를 차림. 시 부주석의 일왕 면담은 24분에 불과했지만 일본 정치권은 이 ‘특례 면담’ 때문에 쑤신 벌집이 됐음.
- 야당과 보수언론은 궁내청에 압력을 넣어 ‘1개월 사전신청 룰’을 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 사장을 ‘천황의 정치적 이용’ ‘위험한 권력 행사’ 등으로 격렬하게 공



- 격함.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를 비롯한 여권은 ‘국가의 중요 손님을 천황이 면담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야당이 오히려 왕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음.
-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의 전날 밤 폭탄 기자회견으로 파문은 더욱 증폭됐음. 오자와 간사장은 ‘1개월 사전신청률’을 깨고 특정인에 천황의 특례면담 혜택을 주는 것은 천황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발언으로 이번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하케다 신고(羽毛田信吾) 궁내청 장관을 겨냥해 “사표를 제출하고 그런 말을 하라. 1개월 룰이 법에 있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림.
 - 오자와 간사장은 궁내청 장관이 공무원인만큼 내각의 입장에 충실해야 하며 정부가 결정한 일에 이러쿵저러쿵 다리를 거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라는 시각임. 민주당 핵심부는 궁내청 장관이 내각과 사전 조율 없이 황실을 업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주도의 정책운영에 반감을 품은 공무원 집단 반발의 한 부류쯤으로 치부하고 있음.
 -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은 정치주도의 정책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황실과의 관계도 과거 자민당 정권 때와는 달리 설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헌법상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해 ‘정치 이용’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잘 모르는 소리라는 것임.
 - 하지만 야당인 자민당은 오자와 간사장의 공격적 기자회견에 대해 헌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규탄함.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각이 천황의 면담에 대해 조언과 승인을 하는 경우라도 헌법상 상징적 지위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여당 수뇌들이 고도로 민감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함.
 - 요미우리신문은 일왕의 특례 면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이용에 우려를 표시한 궁내청 장관을 응원하는 전화와 메일이 1천 통 이상 날아들었다고 전함.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예에 따라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차기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려 했던 시진핑 부주석도 첫 방문지에서 찬물을 뒤집어쓴 격이 됐음.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자신의 일왕 특례 면담이 일본에서 큰 파문을 빚으면서 자신을 도왔던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임.

아. 기타

● 후진타오 “일국양제 확고히 완성해야”(12/20)

- 마카오의 주권이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0일로 10주년을 맞음. 마카오 정부는 이날 오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돔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홍콩 행정수반인 도널드 창(曾蔭權) 행정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권반환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함.



- 후 주석은 축사를 통해 마카오가 지난 10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가2체제)를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국양제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후 주석은 “일국양제는 중국 정부와 홍콩, 마카오가 공동으로 노력해 발전시켜온 제도”라면서 “마카오는 새 행정장관의 지도 아래 ‘일국양제’를 흔들림없이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후 주석은 또 마카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선 마카오, 홍콩, 광둥(廣東)성 등 주장삼각주 지역간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함.
- 마카오는 주권이 반환된 해인 1999년 말에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3천844달러에 불과했으나 카지노와 관광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8년에는 1인당 GDP가 3만9천377달러로 급증함. 이날 마카오 주권반환 10주년 기념식은 마카오의 제3대 행정수반인 페르난도 추이(崔世安) 새 행정장관의 취임식을 겸해 열림.
- 추이 행정장관은 “향후 5년 내에 경제의 다원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카지노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제회의, 전시, 물류,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함.

● 日, 미·러와 안보회의 내년 개최(12/20)

- 일본과 미국, 러시아가 정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안전보장 관련 회의를 내년 3월에 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전함. 이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회의에서는 북한 핵 문제 등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과 3국의 신뢰관계 강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안보 회의는 일본의 국제문제연구소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안보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게 됨. 3국 안보 전문가 회의는 1994~1998년 이래 처음임.

● 日 하토야마 지지율 계속 추락(12/20)

-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음.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18~19일 전국의 유권자 1천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하토야마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5%,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남. 지난 4~6일 실시한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9%,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였음. 앞서 지지(時事)통신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46.8%로 지난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한 바 있음.
- 하토야마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에 대한 그의 결단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됨.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 후텐마 비행장 이전 지역에 대한 결론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하토야마 정권의 결



정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로 과반수를 점했고,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답변도 68%에 달함. 일본 국왕의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특별 면담에 대해서는 44%가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반면 47%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MB “GGGI, ‘저탄소 지구촌’ 싱크탱크될것”(12/19)

- 이명박 대통령(MB)은 18일(덴마크 현지시간) 내년 상반기중 설립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관련, “각국의 녹색성장 계획을 지원하고 저탄소 지구촌을 창조해나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 대통령은 이날 코펜하겐 벨라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등에 이어 환경건전성그룹(EIG) 국가정상 대표로서 연설함.
- 이 대통령은 전날 당사국 총회 국가연설을 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연설에 나서 당사국 총회 참석한 110개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두번의 연설 기회를 가짐. 이 대통령은 “지구는 대체재가 없다.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대체할 것도 없다”며 “설령 오늘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이 행동을 막는 이유가 되도록 하지는 말자”고 역설함.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회의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임.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삼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녹색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도록 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고 밝힘.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으며, 정상회의장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간이회동을 갖고 합의문 도출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짐.

● 마잉주 “한·미·일과 FTA 체결 원해”(12/15)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원한다고 밝힘. 마 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국 대륙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교역 강화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하지만 “언제나 본토(중국)에서 그런 협정을 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음.
- WSJ은 14일 마 총통과 인터뷰 내용을 신고 지난달 총통 집무실에서 면담이 이뤄졌다고 밝힘. 마 총통은 대만에 긴급한 사안으로 중국 본토와 교류와 화해를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를 꾀으면서 “지역의 경제 통합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이 뒤처져 주변부로 밀려날까 두렵다”고



말함. 그는 특히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간 FTA가 내년 1월부터 전면 발효되면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섬유 등 중국으로의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함. 아울러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대만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매우 신중하게” 중국과 경제 개방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마 총통은 대만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악영향을 이겨낼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함.

- 그는 또 양안 관계의 미래에 대해 “양측이 어떤 체제가 중국 문화와 중국인을 위해 더 나은지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임기 내 통일과 독립, 무력 사용을 않겠다는 자신의 ‘3불(不)정책’을 설명함. 그는 교역과 방위, 민주주의를 통해 중국과 긴장완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 본토를 포용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말함.
- 마 총통은 동시에 “(양안 간) 긴장완화는 미국으로부터 꾸준한 무기 공급에 크게 의존한다”면서 “대만은 자신의 영토를 지켜낼 충분한 방위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과) 협상장에 나서기를 꺼릴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만 정책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무기 구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 한·인도 CEPA 내년 1월1일 발효(12/15)

-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힘.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과 수입액의 85%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고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됨.
-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신흥 성장국인 브릭스(BRICs)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인도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기대됨.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및 세계 4위의 구매력을 보유한 나라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한·인도 CEPA 발효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약 8억달러) 증가하고 총 39억달러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내년 1월1일에는 한·인도 CEPA와 함께 태국에 대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품 및 서비스 협정도 발효됨. 이 경우 태국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오는 2012년까지 92.1%, 2017년까지 94.4%의 관세가 철폐되고 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